

# 주간 통일정세

2014-37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전단 살포에 반발…“南, 대화 입에 올리지 마라”(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2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대북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빼라살포 망동은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음을 전함.
  - 통신은 이번 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고 "괴뢰 당국은 더 이상 대화요, 신뢰요 하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고위급 접촉 제안 등 남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
- 北국방위, 차대통령 유엔연설 비난(9/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위가 27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거론하며 "이번에 박근혜는 제 스스로 자신이 현대판 사대매국노이며 역적 중에 가장 악질적인 만고역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난했음을 보도함.
  - 통신은 또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 핵억제력의 사명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이 땅을 집어삼키려는 날강도 미제의 존재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며 박근혜와 같은 현대판 사대매국노들을 매장해버리는 데 있다"고 위협하며, "이번에 박근혜는 베를린 장벽 해체 25년을 거론하는 것으로 골수에 배어있는 흡수통일 야망까지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함.
  - 또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공식 매체에 교육위원회와 조선직업총동맹 간부, 동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 등 주민들이 출연하여 박 대통령을 '미국의 창녀', '인간추물', '천치' 등 극히 거친 말로 비난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南, 관계개선 실천적 조치하면 대화의 문 열릴 것"(9/2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3일 '관계개선 의지는 실천으로 검증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화와 신뢰를 말하기에 앞서 대화와 신뢰 조성을 가로막는 동족대결정책부터 철회하고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뼈라 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도 '북남대화의 빚장을 지른 장본인은 누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속에 없는 대화 타령을 하기 전에 북남관계 개선에 저해를 준 저들의 잘못에 대해 따져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때면 북남 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릴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매체, 남북 간 '북한인권대화' 제의 망비난(9/2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뒤가 썩긴 자들의 뒷골방 쓸라닥질(헐뜯는 짓)'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대화는 "어떻게 해서라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물칠을 하려는 가소로운 푸념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매체는 이어 북한에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남측의 세월호 참사·윤일병 구타 사건 등을 언급, "오히려 인권문제가 심각히 논의돼야 할 곳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되는 오늘의 남조선"이라고 강조함.
- 北 신문 "10·4 공동선언 존중없는 대화는 기만"(9/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자주통일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떠난 그 어떤 대화와 신뢰도 거짓이며 기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또 논평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북공동 선언을 부정해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동선언 이행 여부는 남측이 관계 개선을 원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거듭 주장함.

- 北, 박 대통령 유엔 연설 사흘째 원색 비난(9/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대결에 미친 정치매춘부의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며 "박근혜 패당은 정면 대결을 선포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논평은 핵 문제와 관련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면서 핵전쟁도발 책동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핵 문제는 애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핵개발은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함.
  -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행적과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박 대통령을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거칠게 비난함.
  - 신문은 철도성 직매위원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작업반장 등의 글을 함께 싣고 박 대통령을 "동족을 비방하는 대결 미치광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며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軍 "백령도 인근서 수거 무인기 잔해 北기종과 동일"(9/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국방부가 "백령도 서쪽 바다에서 지난 15일 수거된 소형 무인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지난 3~4월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동일 기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뉴스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향적 등 주요 정보는 수거 당시 동체가 심하게 굽혀 있었고 내부 비행조종 컴퓨터, 카메라 등 주요 부품이 유실돼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북한 서해지역에서 발진 후 추락했거나(북한 내에서) 시험운용 중 추락해 조류에 의해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음을 덧붙임.

##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北,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南' 당국자들은 대화와 신뢰를 말하기에 앞서 북침 합동군사연습과 빼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軍의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기념행사'(9.24~26) 개최 예정 관련 '국제체육경기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와 친선의 이념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북남관계 개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비난(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양국의 「전작권(전지작전통제권) 전환시기 '2020년 이후 연기' 협의(9.6,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에 대해 "미국이 남조선 영구강점 명분을 만들기 위한 억지"라며 '미군 철수' 주장(9.2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對北 빼라살포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민족·반통일적 대결망동'이며 우리 당국이 '비호 조장시킨 反北 심리모략전의 연장'이라고 "주모자·가담자들 단호한 징벌" 위협 지속(9.24, 중앙통신·민주조선)
- '전단 살포' 관련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공화국에 대한 가장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너절한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군대의 보복타격은 예고없이 가해질 것'이라고 연일 위협 속에 우리 당국의 '분별있는 처신' 주장(9.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낙동강지구 전투기념식(9.24~26)' 진행 관련 '국제 체육경기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와 친선의 이념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北)를 자극하여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 개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발'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말로만 대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적대행위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9.25, 평양방송)
- 北,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떠난 그 어떤 대화와 신뢰도 거짓'이라며 '南' 당국이 진심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신뢰에 관심이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9.26,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국방투」 정책국 대변인 담화(9.27), 대통령의 유엔 총회 총회 기조연설(9.24, 북핵·인권문제 등)에 대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첫 번째 화근"이라고 신랄히 비난 및 '역적우리들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고 위협(9.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국방부·외교부장관 발언(북핵·미사일은 한반도·亞-태지역과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 요인, 북한 인권대화 제의 등) 관련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현실왜곡'이라고 주장 및 '핵억제력 강화' 역설(9.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관련 '핵억제력이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반공화국 대결에 계속 기승을 부린다면 자멸을 촉진하는 비참한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연일 실명거론 비난(9.2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 리수용 "자주권·생존권 위협 제거되면 핵문제 풀릴 것"(9/28, 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 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힘.
  - 리 외무상은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 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리 외무상은 "인권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함
  - 지난 22일 '북한인권고위급대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참석에 반대한 것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인권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 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함.
  -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리 외무상은 "냉전이 종식된 지 4분의 1 세기가 돼오는 오늘 조선반도에서만 해마다 한번에 50만명이 넘는 대병력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함.
  - 또 북한은 지난 1월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제안했는데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3, 4월과 8월에 강행됐다고 비난하면서, 군사훈련의 중단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했으나 외면당했다고 말함.
  - 그는 연설에서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리는 원로원이 아니다"는 말로

미국 주도의 안보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며 "상임이사국들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38노스 "北 핵·미사일 연구진 폭넓은 세대교체"(9/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8노스'가 22일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광범위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음을 전함.
  - 뉴스는 '노스 코리아 리더십 위치'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튼이 22일 38노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지난 7월 초 숨진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비서직을 내놓은 2010년 이후 북한 핵·미사일 연구진 내부의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전병호 전 비서의 업무를 박도춘 비서와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이 물려받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기고문이 북한 핵·미사일 연구진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부상한 핵심 인물로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과 당 기계공업부의 홍승무, 홍영철 부부장 등 3명을 꼽았다고 뉴스는 전함.
- 北 "핵억제력은 인권수호 담보...더욱 강화할 것"(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평화과괴자, 인권유린자들의 녀두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적대세력들의 침략을 짓부수는 조선반도 평화 수호의 보검이며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 수호의 담보인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우리의 핵억제력은 외세의 침략을 격파분쇄하는 자주권 수호의 군사적 담보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보검"이라며 "윤병세 역도가 우리의 핵억제력과 인권문제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모순'을 떠들어댄 것도 가관"이라고 비난함.

## 다. 회담 관련

- 북한 유엔대사 "당분간 '북미·남북 대화' 가능성 없다"(9/28,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 자성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당분간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특히 자 대사는 15년만에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한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포함한 북한측 인사가 미국측과 만날 수도, 만날 계획도 없다고 명확히 밝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27일 오후 리 외무상과 함께 유엔본부로 들어선 자성남 대사는 연합뉴스와 만나 '리 외무상이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측 인사들을 만났느냐'는 물음에 "만나지 못했다"고 말함.
  - 자 대사는 '리 외무상이 미국측과의 만남을 시도했느냐'며 설명을 요구하자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관한 회의(북한 인권회의를 지칭)에 참석을 희망했으나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 이후 미국측과의 추가 접촉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선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한 미국측의 태도에 비춰 미국이 우리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후 더이상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시도할 계획도 없다"고 말함.
  - 이어 자 대사는 '그렇다면 당분간 미국과의 접촉은 없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함.
  -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없다"면서 리 외무상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출국한다고 덧붙임.
  - 아울러 자 대사는 '이번 유엔총회 기간 미국측과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 북한이 미국 또는 한국측과 만날 수 있느냐',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되물자 "없다고 본다"면서 "대화 재개 등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자 대사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대화 제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덧붙임.

## 라. 대미국

- 북한 수감 미국인 매튜 밀러, 형 선고후 모습 첫 포착(9/25, AP통신)
  - AP통신의영상서비스채널(APTN)은 가족과의 전화 통화를 위해 북한 교도관과 함께 평양의 한 호텔을 찾은 밀러와 만나 짧게 얘기를 나눴다며 그의 모습을 25일 보도함.
  - 통신은 밀러가 노동교화소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질문에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한다. 이는 대부분 땅을 파고 다니는 등 농사일"이라고 답했다며 "그 외에는 그저 격리돼 있으며 아무와도 접촉이 없다", "하지만 현재 건강은 좋으며, 다친 데도 아픈 데도 없다"라고 말했음을 전함.
  - 또 미셸 오바마 영부인, 존 케리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을 향해 직접 쓴 탄원서를 가족에 보내는 편지 안에 동봉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마. 대중국

- 北, 불량식품 경계하며 中 '멜라민 파동' 거론(9/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오늘의 세계' 코너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불량식품들은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그것(불량식품)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치명적인 후과(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미 때가 늦는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짜, 불량식품 추문사건들이 그 대표적 실례"라며 "2008년 중국에서는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첨가한 애기용 우유를 먹은 후과로 콩팥이 손상된 6명의 애기가 죽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함.
- 북한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월경 인정하라고 폭행"(9/24, 경화시보)
  -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지난 17일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석방된 선장 야오루이성(姚瑞生)이 "북한 측이 월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마구 때려 결국에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음을 24일 보도함.
  - 신문은 또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해 "총을 들고 우리 배에 올라탄 북한 사람이

서툰 중국어로 '당신들이 경계선을 넘어 그물을 던졌다'고 말해 즉각 이를 부인하며 항해용 내비게이터를 확인해보라고 따졌지만, 북한 사람은 '어선의 내비게이터는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들을 선실로 몰아넣고 배를 북한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으며 북한 측이 지난 14일 해당 어선의 선주에게 전화해 25만 위안(약 4천20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음을 덧붙였다.

## 바. 대일본

- 일본, 유엔총회 계기로 북한에 납치문제 '압박'(9/24, 산케이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 자신이나 남은 가족에게 몇십 년에 걸쳐 건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주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송일호 "29일 북일회담, 1차 조사 통보 목적 아냐"(9/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열리는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27일 "이번 회담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국의 합의 이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음을 전함.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北, '김정은 친서' 유엔총장에게 이례적 전달 눈길(9/28,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27일(현지시간) 리수용 외무상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정부 관계자는 28일 "집권 3년이 다 되어가는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 하나가 정상국가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라면서 "외교무대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함.

## 자. 기타 국가

### ■ 특이사항 없음

- 미국에서 소수인종 및 민족들의 권리침해현상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 관련 '인권옹호를 떠드는 미국이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인권후진국'이라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들기 전에 자기의 인권실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9.22,평양방송)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강석주 黨 비서)과 몽골인민당 대표단의 회담, 9월 20일 인민당청사에서 진행(9.22,중앙통신)
- 몽골 사회민주여성동맹 대표단(단장: 썬.초그줄마 위원장), 9월 22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9.22,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오바마 대통령의 IS 격퇴를 위한 '반테러전략'은 "수많은 민간인 대학살 참극을 낳은 기존의 '반테러전'"이라며 "미국이 이라크에서 '반테러전'을 또다시 재현하고 그 영역을 시리아까지 확대하는 경우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9.23,중앙통신·민주조선)
- '美, 이슬람교 국가가 중동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게 박멸하는 것이 목표' 발언(조 바이든 부통령, 케리 국무장관 등) 관련 '미국이 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력이 마치고 세계에 평온을 가져올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맥 빠진 자의 한갓 객기에 불과하다'며 '민심을 잃은 미국의 멸망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嘲笑(9.25,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014년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 9월 25일 전기철 부국장을 비롯한 국가해사감독국 일꾼들과 駐北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9.25,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 주도 '북한 인권 고위급회의' 개최(9.23, 뉴욕) 및 北 대표의 참석 무산과 관련 '미국의 對北 고립압살 책동의 연장선에서 감행된 너절한 反北 인권 광대극, 反北 모략'이라고 반발(9.27,중앙통신)
- 北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안동춘 부의장)↔몽골 국가대표의 대표단(단장: 르 곤치그도르지 국가대표회의 부의장) 회담, 9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9.27,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9월 25일 피지 수상으로 임명된 '보리케 바이니마라마'에게 축전(9.27,중앙통신·중앙방송)
- 訪北(9.22) 몽골 사회민주 여성동맹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대성산혁명열사릉·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경상유치원 등 참관(9.27,중앙통신·중앙방송)
-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센터 대표단(단장: 프란시스 마우트너 마르크호프 소장), 9월 27일 평양 도착(9.27,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北 매체 "김정은의 삼복철 강행군"(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자 '백두산의 후손답게 창조하라'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자동화·무인화의 모델로 천지윤활유공장을 재차 선전하며 이 공장에 "원수님(김정은)의 삼복철 강행군 자욱"이 담겨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삼복철 강행군을 함께 선전하며 김 제1위원장이 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삼복철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함.
  
- 北TV, 다리 저는 김정은 보여주며 "불편하신 몸" 언급(9/2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5일 '인민을 위한 영도의 나날에'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초 남포시 천리마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영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김정은)"이라고 칭송함.
  - 방송은 기록영화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천리마타일공장 구내에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무거운 제품을 직접 들어보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며 "온몸 땀으로 흠뻑 젖으셨지만 자신의 노고는 아랑곳 않으시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을 걱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라고 찬양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장성택 후임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최룡해 임명(9/24,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16세 이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한 북한 대표팀이 23일 평양에 도착한 소식을 전하며 이들을 마중 나온 최룡해 당 비서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호명함.
  - 통신은 24일 최룡해 당 비서 외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두철 내각 부총리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위원으로 호명해 국가체육위원회 출범 당시 직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함.

- 환영회에 음악회에…잠행 벗어난 뉴욕의 리수용(9/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리수용 외무상이 27일 낮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중국식당 '선리 팰리스'에서 재미교포단체가 여는 오찬 리셉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리 외무상은 연설 후 맨해튼 '머킨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다. 공식 행사

- 평양국제영화제서 반전·평화작품 다수 수상(9/20; 9/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영화제 폐막 소식을 전하며 영화제 최고상인 '최우수영화상'은 독일 영화 '나의 아름다운 나라'가 차지했다고 전함.
  - 통신은 지난 20일 이들 작품을 소개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지향을 반영한 영화들이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 최고인민회의 '중대발표' 없어(9/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서 대내외 정책과 관련해 '중대 결정'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군 관련 정책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경제관리 방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최고인민회의의 '교육개혁에 총력' 결의(9/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게재한 최고인민회의의 보고자와 토론자 발언 전문을 통해 교육사업에 국가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보고자로 나선 박봉주 내각 총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또 신문은 이에 대해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토론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2017년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체모에 맞는 물질적 토대를 완전히 갖추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음을 덧붙임.

- 박봉주(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의 석탄매장량과 생산실태 현재 요해(9.22,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김정은의 웅대한 설계도에 따라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의해 황무지가 낙원의 등판으로 천지개벽되고(세포·평강·이천군) 있다'며 '오늘 강원도 세포지구에 펼쳐지는 모든 선경들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가 안아온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들'이라고 칭송 및 세포지구 개간성과 선전(9.22, 중앙방송)
- 김정은 서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청년중시 정치를 계승해나가려는 신념의 선언이며 청년운동의 불멸의 대강'이라며 '모든 청년들은 김정은 시대를 세기적 변혁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9월 23일 태형철(총장 겸 고등교육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9.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 지원(9.23,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김정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감사' 전달(9.24, 중앙방송)
- 중앙전력설계연구소 창립('54.9.24) 60주년 기념보고회, 9월 24일 오수용(黨 비서)·김덕훈(내각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온실남새(채소) 과학기술강습(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총 주최), 9월 22일~24일 평양에서 진행(9.24, 중앙방송·평양방송·중앙통신)
- 제10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 9월 26일 만경대 방문(9.26, 중앙통신)
-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9월 26일 박춘남(문화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9.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대표단(단장 : 아나톨리 돌가체프 중앙위 1비서), 9월 2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9.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대표단(단장 : 리동제 회장)과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 신경화 최인태 교장 각각 단장), 9월 26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9.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세계 관광의 날(9.27)」 기념 글을 통해 '북한은 앞으로도 관광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9.27,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방송)
- "당의 통일단결은 선군혁명의 만년초석이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 혁명승리의 담보"라며 쏘민은 '김정은 영도 따라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고 독려(9.27,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현지지도(2009년 9월) 표식비, 9월 27일 평양메기공장에 건립 및 준공식 진행(9.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천 AG 참가중인 北 올림픽위 대표단과 선수단 성원들, 9월 27일 "남조선 인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그리는 밤' 모임을 진행했다"고 보도(9.28, 중앙통신)
- 北 용양광산, 종합적인 봉사시설인 '백금원' 새로 건설(9.28, 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北 중앙예술단, 지방 생산현장서 공연...증산 독려(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3면 대부분을 할애해 국립연극단을 비롯한 여러 중앙예술단의 위문공연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함.
  - 신문은 4·25예술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들로 구성된 영화예술인 경제선동대는 청천강화력발전소와 룡수탄광 등에서 위문공연을 진행했으며 국립민족예술단은 평양화력발전소 생산현장에서 공연무대를 펼쳤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의 공연을 봤다는 2·8직동탄광 김명수 분초급당비서가 "예술인들이 막장에까지 들어와 노래도 불러주니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갱 안의 탄부들을 이끌어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음을 보도함.

#####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北 8월 식량배급량 하루 250g...3년 만에 최저"(9/24,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24일 지난달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주민 1명당 하루 250g으로 최근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의 '2014 북한 가뭄과 식량안보 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보고서에 의하면 봄 가뭄 탓에 지난달 주민들에게 분배한 식량 배급량이 북한 당국 목표치(573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VOA는 전함.
  
- 현대연 "北 농업개혁 성공 시 10년뒤 GDP 2배로 늘어"(9/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등이 25일 낸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농업개혁 사례를 토대로 이처럼 추정했다고 전함.
  -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장경제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개혁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며 개혁안에는 생산체제를 가족 단위 자율경영제로 바꾸고 국가와 개인 간 생산량 분배비율도 기존 7대 3에서 4대 6으로 개인 몫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뉴스는 전함.

## 라. 대외 경제관계

- 중국 관광업계 "북한 서비스·태도 달라졌다"(9/19, 중국신문사; 9/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신문사가 지난 19일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에서 개막한 '제3회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동북아관광포럼'에 참석한 중국 여행사 대표들이 북한의 유례없는 서비스·태도 변화를 언급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들어 자가용, 열차, 전세기 등을 이용해 북한관광을 떠나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북한 측이 예전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8개월째 통계상 '제로'(9/14, 교도통신; 9/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세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중국무역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올해 8월 북한에 수출한 원유(분류코드 HS 2709)의 규모는 '0'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북한 측에 핵개발 중단이나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을 수출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음을 덧붙임.

- 제10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2~25) 개막식, 9월 2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송도원역-세갈역 사이 철길 개통 및 송도원역 준공(9.23, 중앙통신)
- 北 광명레드(LED)·태양전지공장, 축산과 남새생산 등에 효과적인 여러 가지 '기능성 레드(LED)등' 개발 및 도입선전(9.25,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과 지능정보연구소, 투과식 전자현미경의 CNC(컴퓨터에 의한 수치제어)화 실현(9.26,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에서 '신형 진동측정 및 균형잡이기구(베어링 등 마모에 의한 진동을 측정·분석, 고장진단) 개발 도입' 선전(9.27,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U-16 축구 선수들 금의환향에 축제 분위기(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장하다, 어머니 조국을 빛낸 미더운 아들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북한 16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23일 평양에 도착한 소식을 대서특필함.
  - 신문은 "버스의 앞길에 꽃보라가 뿌려지고 환영의 꽃바다, 기쁨의 춤바다가 펼쳐졌다"며 "주체체육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이 어린 축구선수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 거리를 뜨겁게 달궜다"고 묘사함.

- '체육열풍' 北, 스포츠 중계방송대회 개최(9/27,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에서 '전국체육 방송화술' 경연이 개최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한 심사위원과의 말을 인용해 이번 대회가 "날로 높아가는 대중의 체육 열의에 맞게 체육방송 화술에서 재능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함.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남한 정착 탈북자, 체중 늘면서 당뇨 위험 커"(9/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가 25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통일보건 의료학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보건의료 연구의 흐름과 미래'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남한에 와 체중이 5% 이상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은 체중이 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무려 9배나 높아졌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뉴스는 또 김 교수가 "대사증후군이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고려할 때 현재 탈북민의 대사증후군 유병 규모는 머지않은 시기에 이로 인한 당뇨병의 급격한 증가를 예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을 덧붙였다.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건강한 몸 만들자"...北에서도 '코어 운동'에 관심(9/22, 조선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신보가 22일 "몸중심 근육의 발달과 훈련이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속에서도 관심사로 되고 있다"며 최근 통일거리운동센터를 비롯한 헬스장을 중심으로 코어근육운동이 인기를 끈다고 보도했음을 전함.
  - 연합뉴스는 북한에서 코어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제12차 태권도 기술혁신경기, 9월 16일~23일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진행(9.23, 중앙통신)
- 최창식(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장 교수 박사),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예방약 개발 추진 및 감염증과 피해에 대한 주민 홍보' 등 '예방조치'에 총력(9.24, 중앙통신)
- 홍은정 선수, 9월 24일 여자 체조 도마 금메달 등 北 선수들의 '제17회 인천 AG, 메달 쟁취' 소식 보도(9.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립교예단 예술공연무대, 9월 25일 능라인민유원지에서 시작(9.25, 중앙통신)
- 北 여자축구팀, 제17차 인천 AG 여자축구 8강전(9.26)에서 중국을 1:0으로 이기고 준결승 진출 보도(9.27, 중앙통신)
- 전국 체육방송 화술경연(각道 선발 60여명 참가), 9월 23일~27일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에서 진행(9.27, 중앙통신)
- 정학진·김지성 선수, 9월 27일 '제17회 인천 AG' 남자 자유형레슬링 57kg급·남자 개인 10m 이동목표혼합사격(리닝타겟)에서 각각 금메달 획득(9.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차대통령 유엔연설> "북핵 스스로 포기해야" (9/2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함.
  -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핵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함.
  -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함께 동북아에서 역사와 영토,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나 위협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함.
- 미국 한반도팀 한중일 순방...6자회담 재개 논의 (9/25, 연합뉴스)
  - 미 국무부는 25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 한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데이비스 대표의 이번 순방에는 이달 초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시드니 사일러 신임 6자회담 특사와 엘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 수석들 간의 정례적 협의 차원"이라며 "장기 교착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각국의 견해를 조율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데이비스 대표는 2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중국 측 고위당국자들과 면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 이어 30일 서울에 도착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며 다음 달 1일에는 도쿄에서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면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 윤병세, 이란에 "북한, 핵포기 노력해 달라" (9/27, 연합뉴스)

-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란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함.
- 이날 윤 장관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그 간의 경과 및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자리프 장관은 핵무기는 절대로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한반도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분명한 입장임을 강조함.
- 자리프 장관은 이란과 북한 간 최근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군사협력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윤 장관은 자리프 장관의 경제협력 요청에 이란 핵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짐.

## 나. 미·북 관계

■ 케리 "북한, 사악한 정치수용소 폐쇄해야" (9/23, 연합뉴스)

-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관련 장관급 행사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정치범 강제 수용소를 '사악한 제도'(evil system)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함.
- 그는 특히 "여기 모인 우리는 한목소리로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닫아야 하고, 이 사악한 시스템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인간의 본성 자체를 짓밟는 북한의 지독한 행태를 더는 눈감고 볼 수는 없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행위"라고 지적함.
- 그는 앞서 지난달 14일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문화연구센터에서 한 연설에서도 "북한의 강제 수용소는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지금 바로 폐쇄돼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음.

- 미 태평양사령관 "북, 미 본토위협 이동식 ICBM 실전배치 수순" (9/27, 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힘.
  -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실전배치가 어느 단계에 와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고, 다만 "KN-08이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도로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는 대포동 2호와 같은 고정식 ICBM과 재래식 전력이 북한의 주요 위협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바꿔놓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특히 "이동식 ICBM의 배치는 고정식 발사대를 감시하기보다 훨씬 어렵다"며 "발사 이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며, 즉석에서 실제 무기인지 실물 모형인지를 판별해내는 감시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할 경우 미국이 이를 선제공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됨.

#### 다. 중·북 관계

-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8개월째 통계상 '제로' (9/23, 연합뉴스)
  -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무역협회의 중국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북한에 수출한 원유(분류코드 HS 2709)의 규모는 '제로'(0)로 확인됐고, 이로써 8개월 연속 통계상 '제로'를 기록함.
  -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북한 측에 핵개발 중단이나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을 수출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함.
  - 그러나 북한의 전력난이 눈에 띄게 악화하는 것 같은 징후가 없는 점으로 보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무역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중국 "어선 나포사건 파악 중"…'北과 협의' 시사 (9/26,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이 서해상에서 조업 중에 북한에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당국과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을 시사함.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도 그와 관련한 보도를 보았다"면서 "관련 채널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고, 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소통을 유지하면서 어민들의 해당 해역 조업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앞서 중국 신경보는 지난 12일 북중 해상경계선과 가까운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북한 당국에 나포된 뒤 선원 6명은 풀려났지만, 어선은 25만 위안의 벌금을 요구하는 북한 측에 여전히 억류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북 중 신압록강대교, 10월 말 준공" (9/26, 연합뉴스)
  - 중국 현지 매체인 단둥일보는 26일, 단둥시 공산당위원회 다이위린 서기가 25일 오후 단둥의 주요 당·정 기관 간부들과 신압록강대교 공사 현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며 대교의 전체 공정 목표가 올해 10월 말 준공이며 연결도로 역시 교량 공사에 보조를 맞춰 완공된다고 보도함.
  - 다이 서기는 이날 시찰에서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척 상황과 문제점 등을 보고 받은 뒤 "신압록강대교는 유라시아 육로 통로의 일부분으로, 단둥을 비롯한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중국 동북지역 발전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각 시공 단위는 공사 품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짐.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전체 사업비 22억 2천만 위안(약 3천700억원)을 모두 부담해 건설 중인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측이 대교 연결 지점에 통관시설과 연결도로를 갖추지 못해 북·중이 애초 합의한 연내 차량 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라. 일·북 관계

- 일본, 유엔총회 계기로 북한에 납치문제 '압박' (9/24,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간의 협이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함.
  -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 자신이나 남은 가족에게 건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주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일본 정부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납치문제를 북한 내 인권 문제나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 일북, 29일 중국 선양서 정부 간 협의 개최 (9/25, 연합뉴스)
  - NHK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5일(한국시간) 기자들에게 일북 양국이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중국 선양에서 정부 간 협의를 다시 갖는다고 밝힘.
  - 이날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협이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 통보가 아니라 그간의 조사 진척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협의에는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담당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할 전망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측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할 조직으로 설치된 특별조사위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1년은 소요될 것이며 현재는 초기 조사단계 수준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함.

## 마. 기타

- 북한 인권개선 유엔서 첫 장관급회의…열악한 인권실태 성토 (9/24, 연합뉴스)
  - 한·미·일·호주 외교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 모여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고위급행사를 개최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적했고, 특히 윤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대화를 전격 제의해 북한의 대응이 주목됨.
  - 이번 회의는 케리 국무장관이 주재했고, 우리나라의 윤 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 참석 대상도 미국 측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인 신동혁을 초청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생생하게 전하도록 한 것 역시 미국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초안을 작성하며 50여 개국이 참가하는 문안 수정 작업을 거쳐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잇따라 상정될 전망으로 미국은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표현이 결의안에 들어가고 제재안 찬성국가의 수도 늘리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임.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 외교장관 회담…북한 인권 등 의견 교환 (9/24, 연합뉴스)
  - 제69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찾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심사인 북한인권 문제, 유엔 총회 안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짐.
  - 케리 장관은 에볼라 확산 방지, 테러리스트 방지 등을 위한 미국 측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본인이 주재하는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함.

- 이와 더불어 미국이 더 이상 대인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사정이 특별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반도만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고, 다만 "대한민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은 적극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임.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큰 틀 마련하고 내용 다듬는 중" (9/25, 연합뉴스)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5일 한미 양국이 협상중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큰 틀은 대충 마련하고 내용을 잘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고, "개정 협정은 본문과 부속서로 돼 있으며 분량이 A4용지로 30장이 넘을 수 있다"면서 "문안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을 잘 묘사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문안을 다듬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함.
  - 한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음.
  - 미국 내 의회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양국은 현재의 개정 협상을 사실상 연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달에도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 본 협상 내지 소인수 협의를 가질 예정임.
- 도널던 "한미 안보동맹, 靑 평화에 주도적 역할" (9/25, 연합뉴스)
  - 톰 도널던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 강연에서 "한미 양국의 안보 동맹이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함.
  - 도널던 전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을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파트너로도 중시한다"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적 거리가 좁혀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함.
  - 현재 미국의 한 법무법인 부회장인 도널던 전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4년간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보·군사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 안보 동맹 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바 있음.

## 나. 한·중 관계

- 한중 FTA, 투자 분야 진전…상품은 쟁점 여전 (9/26,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부터 닷새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투자 분야를 놓고 협상에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고 전함.
  - 우 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일부 이견을 축소했다"면서도 "양측 입장에 차이가 크고 여태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함.
  - 그는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까지 협상팀 간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접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APEC 회의에 맞춰 협상이 타결되면 좋지만 시한보다는 실익을 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임.

## 다. 한·일 관계

- 한일 외교장관 회담…정상회담 논의 진전없어 (9/26,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내에 마련된 양자회담 부스에서 만나 양국 관계, 북한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이날 회담에는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양국의 협의도 의제로 제안됐고, 윤 장관은 우리의 입장을 투명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자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두 장관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했고, 기시다 외무상은 납치문제 및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 정부 고위관계자 "일본 성의 보이면 연내 정상회담도 가능" (9/27, 연합뉴스)
  -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안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 "일본이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사(修辭)가 최근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전에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 또한 "기본 원칙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성의 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힘.
  - 아울러 그는 이어 "현재 양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라. 미·중 관계

- 미·중 제15차 방위협의회 10월 중순 개최 (9/26, 연합뉴스)
  - 경연성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월레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제15차 연례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의장으로는 인민해방군 왕관중 부총참모장과 미국 국방부 크리스틴 위머스 정책 담당 차관이 맡을 예정이라고 전함.
  - 이날 경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작년 6월 정상회담 때 군사작전에 관한 상호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문제에서 진전을 보았는지를 묻자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짐.
  - 그는 이달 초 방중한 수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판창룡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상호 연락체제 구축과 행동수칙 제정이 양국 간 전략적 상호신뢰 강화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함.

## 마. 미·일 관계

- "일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내년으로 연기 추진" <교도> (9/26,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6일,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내년으로 늦추기 위해 조정 중이라고 보도함.
  - 이 통신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보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함.
  - 아울러 아베 총리는 그간 미국과 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에 합의했으므로 그에 맞춰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으로 늦추면 결국 모순된 주장이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덧붙임.
  
- 미 의회조사국, 아베 '고노담화 검증' 강도높은 비판 (9/2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7일(현지시간) 입수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의회조사국은 "역사적 상처를 들쭉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나가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힘.
  - 의회조사국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작성경위를 공식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평가들은 이 같은 검증결과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힘.
  -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고노담화 검증 이후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됨.

## 바. 미·러 관계

- 오바마 "러, 우크라 평화안 이행 동참하면 제재 해제" (9/25,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 동참하면 지금까지 취한 대(對)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공통의 도전에 대해 러시아와 다시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양국은 핵무기 감축,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했다고 상기시킴.
  -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대러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사. 중·일 관계

- 중일, 대화채널 2년 만에 재기동...정상회담은 '아직' (9/25,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관계부처는 지난 23~24일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고급 사무레벨 해양협약(이하 해양협약)'을 열어 동중국해 위기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양국 언론들이 보도함.
  - 이번에 개최된 해양협약은 2년 4개월 만에 재개되어 중일 관계의 침체한 갈등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으나, 양국 관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 성사 단계로까지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 성사 문제와 관련해서 "중일관계의 개선과 발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한결같다"면서 "현재 시급한 것은 일본이 성의를 보이고 실제 행동으로 양국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아. 중·러 관계

- 시진핑, 러시아에 "2차대전 전후질서 공동수호하자" (9/24, 연합뉴스)
  -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과 만나 "내년도에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경축 행사를 공동으로 거행할 것"이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 수호에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함.
  - 시 주석은 마트비엔코 의장과의 면담에서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진입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체결한 합의 사항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러시아 상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마트비엔코 의장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전인대-러시아 상원간의 제8차 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함.

## 자. 일·러 관계

- "러·일, 11월 베이징서 정상회담 기본적 합의"<교도> (9/26,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6일, 일본과 러시아가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10~11월 중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 러시아 제재국면에서 방일은 사실상 무산됐고, 그 '대안'으로 11월 APEC을 무대로 한 정상회담을 검토함.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하는 등의 변수로 인해 러일 정상회담에 대한 서방의 반대가 강해질 경우, 일본이 11월 회담을 보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유엔대사 "미국 주재 북한인권회의에 우리도 참석해야"(9/23, 연합뉴스)
  - 북한의 자성남 유엔대표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국인 북한이 참석해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 참석 요청을 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미국이 정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북한 측의 참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 23일 오전 뉴욕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고위급회의는 케리 장관이 주재하며 미국 측이 북한의 참석을 허용하면 이렇게 되면 남북 외무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첫 행사가 됨.
  - 그러나 자 대사는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같은 나라에서 만나 얘기하는 게 낫다"고 말하며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기간에 남북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시사했음.
  
- 북한 유엔대표부 "북한 인권 개선 요구는 모략극"(9/24,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23일(현지시간) 장관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비위에 맞는 일부 국가의 대표만 불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회의 결의가 마치 국제적인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며 "미국의 모략극"이라고 반박했음.
  - 또한 북한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요청했는데도 미국이 거부한 것은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北 매체, 남북 간 '북한인권대화' 제의 맹비난(9/25, 연합뉴스)
  - 북한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남북간 '북한인권대화' 제의에 대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추태"라고 맹비난했음.
  - 이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북한인권 고위급회의에서 나온 윤 장관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임.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뒤가 썩긴 자들의 뒷골방 쓸라닥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대화는 "어떻게 해서라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에 먹물칠을 하려는 가소로운 꾸념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북한에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남측의 세월호 참사·윤일병 구타 사건 등을 언급, "오히려 인권문제가 심각히 논의돼야 할 곳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되는 오늘의 남조선"이라고 밝혔다.
- 또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참가하겠다는 북한의 요구가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벌여놓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일환이며 반공화국모략광대극의 공연장소,"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제멋대로 심리·판결·집행하겠다는 도발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음.

■ 북한 억류 미국인 밀러, 가족과 통화 모습 공개(9/25, 미국의 소리)

- 미국의 'AP통신'은 25일,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위해 북한 교도관과 함께 평양의 한 호텔을 찾은 밀러 씨의 모습을 공개했음.
- 밀러 씨는 노동교화소에서 하루 8시간 농사일을 하며, 그 밖에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또한 현재 건강 상태는 좋으며 아픈 데나 다친 데도 없다고 언급했음.
- 밀러 씨는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영부인, 존 케리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에게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쓴 편지를 'AP통신'에 보여준 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했음.

■ 북, '현장배급'에 희비 엇갈려(9/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올해 수확한 알곡을 협동농장 현지에서 주민들에게 3개월분씩 배급하고 있으나, 배급받은 식량을 가져갈 마땅한 운송수단이 없거나 자동차를 대여할 형편이 안 되는 주민들은 배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선 그들이 포기한 '배급표'를 사들이는 장사꾼까지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협동농장들에서 3개월분으로 오사리만 벗겨 낸 강냉이를 송치채로 배급하고 있다"며 "송치채로인 강냉이는 속팽이의 무게를 감안해 실제 무게의 50%로 환산해 배급을 준다"고 전했음.
- 그러나 그나마 강냉이는 운반하기 괜찮은 편이고 감자를 받게 될 경우, 자동차가

없는 공장기업소나 힘없는 주민들은 옮겨 올 방법이 없어 아예 배급을 포기한다고 그는 말했다.

- 힘 있는 간부들은 가까운 협동농장들에서 배급을 받지만 힘없는 공장기업소나 인민반 부양가족들은 수 백리 떨어진 협동농장들에서 배급을 받아와야 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중앙에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음.
- 한편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배급표'를 사들이는 신흥 장사꾼들이 늘고 있는데, 주민들이 포기한 '배급표'는 kg 당 북한 돈 200원이라는 헐값에 팔리고 있음.

■ 北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차대통령 유엔연설 비난(9/26, 노컷뉴스)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집권자가 직접 유엔 무대에서 극악한 망발질을 해댄 것은 처음"이라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음.
- 북한은 특히 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음.
- 이와 관련해 조평통은 "우리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넣는 극히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고 밝혔음.

■ 리수용 북한 외무상 "윤병세 장관 만날 생각 없어"(9/27, 미국의 소리)

-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앞서 열린 고위급 인권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북한의 요청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음.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VOA'가 리수용 외무상 앞으로 보낸 서면질의에 대해 "(만남을) 제기 받은 적도 없고 설사 제기된다 해도 윤 장관의 행동을 보아 만날 생각이 없다"는 리 외무상 명의의 답변을 26일 보냈음.
- 동시에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린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대한 북한의 참석 요청에 한국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비겁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음.
-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당사자를 참가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도리이며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이번 인권회의를 "정치적으로 허위와 모략극"으로 표현하면서, 북한 대표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윤병세 장관과 할 말이 없고, 찾아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 北 "핵억제력은 인권수호 담보...더욱 강화할 것"(9/27,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노동신문은 이날 '평화과괴자, 인권유린자들의 뉘두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보장은 모순이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지적을 비난하며 핵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신문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외세의 침략을 격파분쇄하는 자주권 수호의 군사적 담보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보검"이라며 "윤병세 역도가 우리의 핵억제력과 인권문제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모순'을 떠들어댄 것도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 北 국방위, 박대통령 유엔연설 비난(9/27,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는 27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칠게 비난했다.
-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거론하며 "이번에 박근혜는 제 스스로 자신이 현대판 사대매국노이며 역적 중에 가장 악질적인 만고역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공식 매체에 교육위원회와 조선직업총동맹 간부, 동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 등 주민들을 출연시켜 박 대통령을 '미국의 창녀', '인간추물', '천치' 등 극히 거친 말로 비난했다.

■ 北, 박 대통령 유엔 연설 사흘째 원색 비난(9/28,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대결에 미친 정치매춘부의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며 "박근혜 패당은 정면 대결을 선포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논평은 인권 문제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불투명한 행적과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박 대통령을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 또한 철도성 직맹위원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작업반장 등의 글을 함께

신고 박 대통령을 "동족을 비방하는 대결 미치광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며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했음.

- 北 외무상 "UN과 인권분야 협조·접촉 용의"(9/28, YTN)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협조와 접촉 그리고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 또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리 외무상은 그러나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걸고 드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음.

## 2. 북한 인권

- 차대통령 "남북 만나 현안논의 필요...北호응 기다려"(9/23, 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주민 간 문화·학술교류 등 동질성 회복 등을 통해 남북 간 협력의 통로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함.
  - 반 총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지원사업인 모자보건사업 등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에 1,400만 달러 기여 등 지원과 지지를 한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미, 북한인권 고위급회의 北 참석요구 거부(9/23, 연합뉴스)
  - 미국 주도로 23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북한의 요구가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23일 전해졌음.
  -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사항을 받은 북한은 좀 더 인권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회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이 이(북한 인권개선)를 촉구하고 (COI 권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회의"라면서 "북한이 COI 자체를 거부하고 인권 개선에 대해 '이행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마당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북한이 참가 신청을 공식으로 했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리는 사이드 이벤트로 공식 행사가 아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공유하는 이른바 공동관심국 간 회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참가를) 신청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이번 회의가 연속성을 갖고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른 고위당국자는 "(회의에서) 결론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병세, 남북 간 '북한 인권 대화' 제의(9/23,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를 표명한 것과 관련,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 또한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개소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유엔 총회에서 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 회의를 주재한 케리 장관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를 '사악한 제도(evil system)'라고 비판하며 수용소 폐쇄를 촉구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북한인권 개선을 일본의 우선 정책순위에 놓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휴먼 리버티,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심 촉구 동영상 공개(9/23, 미국의 소리)

-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인 '휴먼 리버티'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다.
- 독일어로 제작된 이 동영상은 북한에 히틀러가 살아있다, 북한에 아우슈비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무고한 어린이들마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이런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 또한 북한 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출한 유일한 탈북자인 신동혁 씨가 지난 6월 미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소개했음.
  - 휴먼 리버티는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와 독일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수용소에 알게 될수록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 "유엔인권위 서울 사무소 설립 최대한 협조"(9/24, 조선일보)
    - 방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현지 시각)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서울 사무소 설립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러셀 차관보는 "내일(현지 시각 23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탈북자들이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 주민의 복지와 인권을 평화적 방법으로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음.
- 통일부 "남북대화 계기 시 인권문제 협의 기대"(9/24, 연합뉴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남북 인권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앞으로 고위급 접촉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 이뤄지는 대화 계기 시에 인권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임 대변인은 "고위급 접촉이 된다면 이(인권) 문제를 포함, 남북한이 논의하기 원하는 모든 현안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장관의 인권 대화 제의는) 정부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국무부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 책임 물릴 것"(9/24,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 케리 국무장관 주재로 이날 뉴욕에서 열린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의 목적과 실천방안 등을 설명하며 열악한 북한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 우선 회의의 취지로 각 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이 북한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기관과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국제사회에

추구했다고 언급했음.

- 또한 북한 당국의 인권 기록을 문서화하고 알리기 위한 국제적 장치,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음.

■ 독 의원, 베를린서 북 반인도 범죄 규탄(9/24,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연합의 아놀드 파츠(Arnold Vaatz)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 원내 부대표는 25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시위에 참가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독일 의회의 지지를 밝힐 예정임.
- 파츠 부대표실은 파츠 부대표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유린을 지적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권고 내용에 대한 독일 의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독일의 인권단체 '국제인권사회(IGFM: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맥스 클링베르그(Max Klingberg)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과 중국 등의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라고 전했다.
- 클링베르그 대변인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을 강조했다.

■ 北 장애인 200만 명 이상… 복지시설 지원을(9/25, 국민일보)

- 신영순 민족장애인원아협력사무소 소장은 23일 오후 대북지원단체 (사)푸른나무가 개최한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 장애인 제도 및 정책 포럼'에서 북한 장애인을 위한 종합회복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음.
- 신 소장은 북한의 장애인 인구를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을 돕는 것은 북한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종합회복센터가 장애인 분야 남북 협력의 시범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지원을 촉구한 종합회복센터는 푸른나무가 평양에 건설을 추진 중인 '대동강장애인종합회복원'으로, 지난 6월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대동강장애인 종합회복원 설립에 합의했음.
- 신 소장은 "북한 장애인 지원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인권' 다룬 14편 영화 한눈에... '북한인권영화제' 개막(9/25, 데일리NK)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관하고 2014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유일한 영화제인 '북한인권국제영화제(North Korean Human Right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HIFF)'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 주관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최용상 사무국장은 "이번 영화제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음.
  
- 차대통령 "분단장벽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나서달라"(9/2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평화, 일본군 위안부, 북한인권, 글로벌 이슈 등 제반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3대 임무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했음.
  -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인권문제도 동시에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 및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음.
  - 박 대통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으며, 한국에 설치할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인권에 대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을 피력했음.
  - 또한 탈북민 인권을 위한 유엔 기구 및 관련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음.
  
- 정부 "한일정상회담, 열린 입장...여건 마련이 중요"(9/25, 연합뉴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남북 인권 대화에 대해 북한이 비난한 것과 관련, "최근 북한은 자체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국제 인권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고 인권 대화를 반대하는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 사회와 인권 대화 의사를 표명했음에 비춰 앞으로 남북 간 이뤄지는 대화 계기에 인권을 포함해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음.

- 류길재 "남북, 전혀 통하지 않아…막힌 소통 뚫어야"(9/25,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4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했음.
  - 또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과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알린 인도적 지원 확대, 농축산과 임업을 결합한 복합 산업 등의 진정한 뜻은 북한 주민들,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 그는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사업을 이뤄내기 위한 불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동시에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北 몰상식한 비방 강력 유감…스스로 성찰해야"(9/26,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거칠게 비난한 것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과 몰상식한 비방·중상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음.
  - 또한 "북한은 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응당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러셀 차관보 "북한 핵 문제, 인권과 함께 다뤄야"(9/27, 미국의 소리)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과 인권을 한 묶음(twinset)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달라진 인식을 내비쳤음.
  - 러셀 차관보는 최근 불거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자신은 그의 건강 상태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러셀 차관보는 북한에 선택권이 있다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국제법과 결의를 준수하고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면 미국은 역내 다른 나라들과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폐막...북한, 주요 권고안 모두 거부(9/27, 미국의 소리)
  -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8일 개막된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6일 폐막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인권 개선을 촉구했음.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과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와 성폭력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한국의 안형집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이동과 표현,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안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
  - 영국과 호주, 일본, 체코공화국 역시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 등 COI 권고사항을 즉각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도 강조됐는데, 제이드 알 후세인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음.
  - 이 보고서에 담긴 286개 권고안 가운데 북한은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113개만을 수용하고 연좌제 폐지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93개 권고안을 거부했음.
  -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음.

### 3. 탈북자

- '재입북 고경희씨 인권탄압' 고발 기자회견(9/23, 연합뉴스)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정의연대 주최로 열린 '재입북 고경희 씨 북한 보위부 탄압과 정치범교화소 수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 씨의 오빠 고경호 씨와 아들

차성혁 군이 고문 탄압 중단과 교화소 석방을 촉구함.

- 지난 2011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12년 11월 재입북한 고경희 씨는 오빠와 아들의 탈북 사실에 알려지면서 정치범교화소에 수용돼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정의연대는 고경희 씨와 차성혁 군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 보위부의 인권탄압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접수할 계획임.

■ 워싱턴서 탈북자 강제복송 규탄 시위·기자회견(9/23, 미국의 소리)

- 워싱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열려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를 수용하라고 호소했음.
-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미국 내 탈북자들과 함께 2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음.
-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잔인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또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미국행을 기다리는 많은 탈북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음.

■ "남한 정착 탈북자, 체중 늘면서 당뇨 위험 커"(9/25, 연합뉴스)

-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영양 공급 개선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뇨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는 25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통일보건의료학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보건의료 연구의 흐름과 미래'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남한에 와 체중이 5% 이상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은 체중이 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무려 9배나 높아졌다"고 밝힘.
-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탈북자 5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분의 1가량이 남한에서 체중이 5% 이상 증가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정착해 체중이 늘어도 평균적인 남한 주민보다 비만율이 적은데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이미 남한 주민 일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김 교수는 "대사증후군이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고려할 때 현재

탈북민의 대사증후군 유병 규모는 머지않은 시기에 이로 인한 당뇨병의 급격한 증가를 예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필로폰 판매한 탈북자 등 마약사범 34명 검거(9/28, 연합뉴스)
  -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 경찰에 따르면 2005년 탈북한 김모(30)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필로폰 130g을 밀반입해 25명에게 105차례에 걸쳐 1g당 80만~100만 원가량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얼음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필로폰 구매자를 끌어 모았으며 KTX나 고속버스 수하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음.
  - 검거 당시 김 씨의 차량에서는 2억3천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71.7g이 발견됐으며, 이는 2,4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임.
  -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 일하는 30~40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산 25명 가운데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6명의 뒤를 쫓고 있음.

####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 5. 납북자

- 납북자 정보제공 왜 안하나...北·日협상 삐걱(9/22, 헤럴드경제)
  - 교도통신은 21일 북·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제1차 보고에는 납북 가능성이 큰 특정 실종자와 전후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의 정보만 포함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 아베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공인 납치 피해자 1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측은 12명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차 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아베 수상은 도쿄 시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와 관련,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하며 껍데기뿐인 보고는 의미는 없다"면서 "북한은 성의 있게 조사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아베 일본 총리 "납북자 관련 북한 계속 압박할 것"(9/24, 미국의 소리)
  - 납북자 관련 북한의 1차 조사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 사이에 불만이 높아가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거듭 압박함.
  - 아베 총리는 22일 "일본은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 귀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적절한 조사를 하기로 약속했고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조속히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으며, 정직성, 진정성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음.
  
- 일본, 유엔총회 계기로 북한에 납치문제 '압박'(9/24,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본이 유엔총회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함.
  -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 자신이나 남은 가족에게 몇 십 년에 걸쳐 건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주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시다 외무상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교섭 상황을 설명하고, 납치, 핵, 미사일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취지를 알렸다.
-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같은 날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몽골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북·일 회담 장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북·일, 29일 중국 선양서 정부 간 협의 개최(9/25, 연합뉴스)

- NHK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5일(한국시간) 기자들에게 북·일 양국이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중국 선양에서 정부 간 협의를 다시 갖는다고 밝혔다.
-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협의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 통보가 아니라 그간의 조사 진척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송일호 "29일 북일회담, 1차 조사 통보 목적 아냐"(9/27, 연합뉴스)

- 오는 29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27일 "이번 회담은 1차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국의 합의 이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 송 대사는 회담이 끝난 뒤 성과를 알릴 것이며, 회담을 앞두고 일본측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던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이번 회담에 북한 측은 송 대사가, 일본 측은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로 참석할 전망이다.

##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영NGO, 북 어린이 1만 명에 두유지원(9/22,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대북지원단체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이 다음 달부터 평안북도 향산과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 어린이 약 1만 명에게 콩우유를 지원한다고 밝힘.
  - 북녘어린이사랑 관계자는 영국 국제구호단체의 기부로 남포와 향산, 사리원 지역 어린이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음.
- IFRC, 올해 대북 재난 대응 사업 평가(9/22,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IFRC)는 올해 대북 재난 대응 사업 진행에 대해 평가하는 회의를 열고, 북한 당국자들과 함께 올해 가뭄, 즉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 및 대책 사업에 대해 검토해보는 자리를 가짐.
  - 이번 회의는 올해 북한에서 극심했던 가뭄과 약간의 홍수에 대한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재난 대응 사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음.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적십자사의 예방책이 더욱 강화돼, 가뭄, 홍수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주민들에게 피해와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통지한 데 대해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니세프, 북한 영유아 사망률 감소 위해 다양한 사업(9/22, 미국의 소리)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는 사업을 시작했음.
  - 바실 로드리케스(Basil Rodrigues) 유니세프 연구원은 UNICEF와 북한 당국의 노력으로 북한 내 5세 미만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강화 사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유엔이 최근 발표한 '2014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지난 2011년 1천 명 당 33명에서 2012년에는 29명, 2013년에는 27명으로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서 55%, 1990년에 비해서 37% 감소한 것임.
  - UNICEF는 북한 어린이들의 주된 사망 원인인 폐렴과 설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와 경구재수화염 (Oral rehydration salts) 등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질과 위생개선 사업도 진행하여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 있음.
  - UNICEF는 북한에서 1년에 두 번 '어린이 보건의 날 (Child Health Days)'을 시행하며, 2살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 명에게 비타민A와 구충제를 나눠주고 있음.
- "北 임산부 영유아 영양식 지원에 써달라"(9/25, 세계일보)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대북 영양 지원사업을 후원할 목적으로 세계식량계획(WFP)에 10억 원을 기부했음.
    - 기부금은 서 회장의 사재 5억 원과 그룹 차원의 매칭기프트 5억 원을 더해 조성됐으며, 북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One Thousand Day'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자 보건사업에 쓰일 예정임.
  - WFP 과자 '김부자 생일선물'로 둔갑(9/25, 자유아시아방송)
    -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에 소학교 이하 어린이들에게 공급된 당과류 세트에 세계식량계획이 'WFP'라는 약자를 찍어 북한에서 생산하는 영양과자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임.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WFP'라고 새겨진 영양과자는 혜산장마당에서 쉽게 살 수 있다"며 "올해는 어린이들에게 준 '생일선물'에도 'WFP' 과자가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혜산곡산공장에서 만든 'WFP'과자가 양강도 어린이들의 '생일선물'에 들어있기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생일선물'속에 든 'WFP'는 '진품'이어서 맛도 좋았다고 덧붙임.
    -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은 "장마당에서 팔리는 'WFP' 과자는 '진품'과 '가품'이 있다"며 "'진품'은 kg 당 가격이 중국인민폐 7원(위안)이지만 '가품'은 인민폐

6원으로 가격이 더 낮(싸)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WFP' 과자가 '육아원'과 '중등학원'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모두 군인들에게만 공급됐으며, 휴가를 받거나 탈영을 해 근무지에 없는 병사들의 몫을 '군관(군지휘관)들이 몰래 빼돌린 것임.
- 현재 북한은 "군인들과 '육아원' 어린이들에게 10개씩 포장된 '영양과자'를 한주에 한 번씩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WFP' 과자"라며 "한주에 20알씩 공급되는 '영양알약' 역시 모두 유엔에서 지원한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리히텐슈타인, WFP 대북 사업에 11만 달러 지원(9/26, 미국의 소리)

- 유럽 중부에 위치한 리히텐슈타인이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1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사업과 관련한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리히텐슈타인 외무부의 마누엘 프릭 대변인은 25일 WFP의 대북 사업에 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2011년 이래 4년째 대북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대북 사업과 관련한 세계식량계획의 자금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은 25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월 말까지 추가로 5천만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초에는 영양지원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북한 내 활동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실제로 WFP는 자금난을 이유로 최근 대북 사업 규모를 30% 줄였으며, 당초 내년 6월까지 사업비용으로 2억 달러를 책정했던 것을 1억3천750만 달러로 조정, 지원 대상 주민의 수도 2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축소했음.

■ 유엔 평양 주재원 "북한 식량 원조 중단 위기"(9/26, 연합뉴스)

- WFP 평양 주재 사무소 디르크 스테겐 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인터뷰에서 내년 이달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초에 유엔의 북한 식량 원조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월스트리트저널은 WFP의 대북 식량 지원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은 식량 배분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잘못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음.

- 미국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 연구소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측이 원조 물자 전달 체계를 들여다볼 수 없게 막고 있는데 WFP는 이에 대해 아무런 군말없이 따른다"고 지적함.
-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도 WFP가 북한 식량 지원 활동을 투명하게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난에 봉착했다고 분석함.

## 8. 북한동향

- 미국에서 소수인종 및 민족들의 권리침해현상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 관련 '인권 옹호를 떠드는 미국이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인권후진국'이라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들기 전에 자기의 인권실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9.22, 평양방송/제 코부터 씻어야 할 인권 범죄국)
- 韓美 양국의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공동 대응에 대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건을 거론하며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라고 주장(9.23, 중앙통신·노동신문/체제 대결 광신자들의 모략소동은 통할 수 없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